

이마트 혁신·리뉴얼, 최대실적 결실 작년 매출기반 올 5600억 투자

작년 매출 16%, 영업익 57%↑
올 매출목표 8% 증가한 23.8조
SSG닷컴 등 자회사도 실적호조



9881억원으로 전년비 10.6% 신장했으며, 영업이익은 844억원으로 전년비 591억원 증가했다.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도 수익성 개선의 요인이다.

SSG닷컴은 온·오프라인 시너지와 그로서리 경쟁력 강화 등의 요인으로 4분기 총매출액이 전년비 30% 신장했고, 영업손익은 전년비 258억원 개선했다. 연간 총매출액은 전년비 37% 증가한 3조9236억원이다. 이마트에브리데이의 4분기 영업이익은 31억원 증가한 48억원이며, 신세계TV쇼핑도 4분기 93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마트는 올해 목표 매출을 전년 대비 8% 증가한 23조 8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신장세를 이어간다.

별도 기준 예상 총매출은 1.6% 신장한 15조 7800억원이다. 각 사업부별 예상 총매출액은 할인점이 1.2% 신장한

11조3300억원, 트레이더스가 10.4% 신장한 3조2200억원이다.

계획 달성을 위해 이마트는 올해 5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

투자 금액의 가장 큰 부분은 이마트 할인점의 텐어라운드를 위해 할애할 예정이다. 총 투자금액의 약 37% 규모인 2100억원을 할인점 리뉴얼 등에 투자한다.

시스템 개선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내실을 위한 투자에 약 1000억 원을, 신규점 오픈이 예정된 트레이더스에도 1100억원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가 할인점 경쟁력 강화 노력과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을 통해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연결기준 매출액 20조원을 돌파했다”며 “올해 온·오프라인 협업을 강화하고, 점포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해 유통업계 선두주자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전금법 개정안, 청산기관 법제화 바람직”

개정안 두고 ‘빅브라더’ 논란

“청산기관 없애기 보다 신뢰 높여야”

“빅브라더가 보고 있다.” 조지오웰의

‘1984’에서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24시간 시민들을 감시한다. 각 집에 설치돼 있는 텔레스크린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의 말·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 텔레스크린을 두고 일부 시민은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일부 시민은 사생활을 침해 당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낀다.

국내에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 논란이 한창이다. 개정안 제36조 9조항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빅테크 업체)는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제공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금융위원회가 감시·감독한다. 즉, 소비자가 OO페이로 결제한 정보를 금융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은 18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결제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거래는 사용자가 빅테크페어의 OO페이를 통해 결제할 금액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정되면 선불로 충전된 금액이나 입력된 계좌,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30만원 한도의 소액후불결제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행위를 감독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일평균 1000만건에 이르는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며 “선불충전이나 소액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 라이선스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자체 결제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신력 있는 외부 청산기관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청산기관의 법제화는 필요하다며 오히려 외부 청산기관을 없애기 보다 외부 청산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산은 거래와 결제 사이에서 얼마를 결제하는지,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장 변호사는 “보통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청산이 필요하지 않지만 너무 거래가 많거나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중간 단계를 거쳐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며 “청산기관을 문제삼기보다 청산기관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1분기 정부주도 일자리 90만개 만들 것”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IMF 이후 고용시장 굉장히 어려워”
민간서 ‘규제개선 수반’ 목소리도



코로나19로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한 인력시장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고용지표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2번째로 심각하다.

/뉴스스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자율과 어떤 책임의 형태 하에서 현장에 밀착되게 방역 효과를 높이면서도 제한 부분은 완화되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도·소매나 음식 쪽에도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온전한 고용 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주도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가 고용 상황 개선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고용 상황이 개선되려면 ‘규제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 개선 없이 민간 기업이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들이 없고 민간이 그 부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해 일자리를 단기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축소’(3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내 투자 축소’(27.2%),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촉진’(21.8%) 등을 선택했다. 기업 규제 강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답변 6.7%에 그쳤다. 지난달 진행한 해당 조사에는 국내 230개 기업(대기업 28개사, 중견 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이 참여했다.

한편 임 수석은 “실질적으로는 민간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답”이라며 재계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규제를 혁신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노인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들이 없고 민간이 그 부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해 일자리를 단기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경영자의 윤리적 측면, 기업 실적에 도움”

》 1면 ‘자주성가 기업인…’서 계속

김의장은 서약서에서 “저와 저의 아내는 죽기 전까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며 “이 기부선언문은 우리의 자식들에게 주는 그 어떤 것들 보다도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임을 확신 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의장도 최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가 보유한 재산은 현재 주식만 10조원 정도임에 따라 최소 5조원을 사회에 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 자제를 털어 조 단위의 기부를 한 것은 김 의장이 처음이다. 이달 말 열리는 구성원 간담회를 통해 기부계획의 밀그림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 의장 역시 이번 발표 이전부터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왔다. 그는 카카오 법인과 별도로 사회적 문제 해결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14년여간 224억 원 규모의 기부를 단행한 바 있다. 김 의장은 “격동의 시기에 사회문제가 다양한 방면에서 더욱 심화되는 것을 목도하며 더이상 결심을 더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기부 통해 기업 가치 높이고, 사회적 책임 강조

기업가의 기부 행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발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SG 경영이란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한 재무적인 요소 외에도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건전한 지배구조에 가치를 두는 경영 행위를 일컫는다. 기부를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국대 경영학부 여준상 교수는 “대

표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경영 활동 전반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며 “대표의 이미지가 기업의 이미지와도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크게 작용하다 보니 테크기업의 대표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영향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트렌드가 생겨나는 것 이면에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높인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밝혔다.

세종대 경영학과 황용식 교수는 “이러한 기부 행위는 경영과 사회적 환원이라는 쌍끌이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경영자의 윤리적, 도덕적 측면이 기업의 실적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기부를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것 이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기대심리를 유발해 기업에게도 플러스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많은 기업가들이 기부를 해왔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기부나 자선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세대 행정학과 장용석 교수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돈 벌고 남은 돈으로 CSR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에만 중점을 뒀다면 최근의 기부 행위는 기업의 수익 자체가 사회 문제 해결과 연결되는 것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 같다”며 “이를 통해 사회와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뤄진 두 의장의 기부 행위가 다른 기업으로도 이어져 사회 전반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구서윤·박태훈 기자 yuni2514@